

해군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발전방향



海 軍 本 部
大 領 事 軒 碩*

◇ 目 次 ◇

<p>I. 서 론</p> <p>II. 미래 해양안보환경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p> <p style="padding-left: 20px;">1. 해양안보환경 특성</p> <p style="padding-left: 20px;">2. 동북아 주요 국가별 해군력 증강 사례</p> <p style="padding-left: 20px;">3. 미래 해전 패러다임의 변화</p> <p>III. 미래에 대비한 해군전략</p> <p style="padding-left: 20px;">1. 평 시</p> <p style="padding-left: 20px;">2. 국지도발시</p> <p style="padding-left: 20px;">3. 전 시</p>	<p>IV. 어떠한 해군력을 건설해야 하는가?</p> <p style="padding-left: 20px;">1. 한국 해군의 현주소</p> <p style="padding-left: 20px;">2. 전력증강 방향 및 수준</p> <p style="padding-left: 20px;">3. 해군 무기체계 발전방향</p> <p style="padding-left: 20px;">4. 조직 발전방향</p> <p style="padding-left: 20px;">5. 운영체계 발전방향</p> <p>V.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p> <p style="padding-left: 20px;">1. 건설을 위한 선결과제</p> <p style="padding-left: 20px;">2. 해군력 건설을 위한 예산 확보</p> <p>VI. 결 론</p> <p>※ 參考文獻</p>
--	---

I. 서 론

영국 사람은 신을 찾아가 평소에 품어 왔던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탈리아는 기후도 좋고 경치도 아름다운데 왜 우리는 그러하지 못합니까” 그러자 신은 “이탈리아

* 해군사관학교·해군대학 졸업,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수료, 경남대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대전함 함장, 함참 전력기획참모부 해상전력차장, 해군기획관리전략기획처장, 해본 전발단 전략발전처장(現)

사람들에게는 게으름을 주고 너희들에게는 근면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대꾸했다.¹⁾ 뒤이어 한국 사람이 신에게 “왜 중동에는 석유를 무진장 묻어 주시고 우리는 그러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신은 미소를 머금으며 “대신 너희들에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에 금수강산을 내리지 않았느냐”고 대답했다.²⁾

단순한 우스개 소리라 할 수 있지만 새천년을 맞이하여 국운상승을 꾀하는 우리들에게 더없이 좋은 경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십자로에 위치하여 각종 지리적 이점을 향유할 수 있다. 북쪽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국가를 통해 유럽 등 대륙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외 방향으로는 삼면의 바다를 통해 오대양 곳곳으로 뻗어 나갈 수 있다.

또한 동경, 베이징, 상하이, 블라디보스톡, 서울 등 동북아의 5대 성장 거점의 한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수도 서울이라는 것을 보아도 뱃길, 철길, 하늘길, 어느 쪽으로 보나 한반도는 동북아의 관문이자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교통의 요충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리 뿐만 아니라 천시 또한 우리 한반도 편에 섰다 할 수 있다. 세계경제 중심이 태평양을 건너 동아시아로 서진에 서진을 계속하여 최종 목적지인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 우리의 3대 수출시장인 미국-일본-유럽이 중국-미국-일본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정보화시대의 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두뇌, 뛰어난 손재주 그리고 순발력은 정보화 물결을 타고 그 옛날 만주 벌판을 누비고 동아시아 해상을 호령했던 우리 민족의 호연지기를 다시 한 번 촉발시키면서 우리 민족이 웅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더없이 좋은 천시와 지리를 맞이하여 국운상승을 꾀하는 우리의 조국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해군전략 및 그러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해군 무기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래 물리적인 힘만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면 전략이란 용어 자체는 소멸되고 말았을 것이다. 즉, 절대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가진 강자에게는 전략 같은 이론이 필요없거나 그 가치가 그리 높지는 않았을 것이다.³⁾ 어쩌면 전략은 상대적으로 약한 군사력을 보유중인 약자를 돕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1) 김재철, 『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국인의 미래가 보인다.』(서울 : 김영사, 2000), p. 56.

2) ibid.

3) 유재갑, “군사전략 · 전술의 이론과 실제”, 국방부, 『호국』(6월호), 1989. 6, p. 61.

현재 우리의 군사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준에 있지 못하다. 총량적인 규모에서는 대북한 균형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군사력 균형으로는 북한의 모험심을 억제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전략무기를 확보한 북한은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을 상대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모한 국가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변의 불특정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도 더더욱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력의 한계상 주변 특정국의 군사력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우리 해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통일 후 주변국의 해군력을 절대적으로 능가하는 우세한 함대를 보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쩌면 항상 열세한 입장에서 함대 운용방안을 강구하면서 국가의 안보 및 국방정책을 뒷받침해야만 하는 입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이 전·평시 전략목표를 정립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전략 개념을 수립해야 하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해군에서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하면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 해양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직면하게 될 해양위협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새로운 해전의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셋째, 평시/국지도발시/전면전시 전략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미래 한국 해군의 전략 개념은?

넷째, 이와 같은 미래의 국면별 대응전략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한국 군의 무기체계 발전방향은?

끝으로 본 논문은 한국 해군의 공식의견을 표명한 내용이 아니고 필자 개인의 의견을 밝혀 둔다.

Ⅱ. 미래 해양안보환경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1. 해양안보환경의 특성

전통적으로 국가이익들이 상충, 문제가 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은 크게 하늘, 땅 그리고 바다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국가간 분쟁은 주로 땅을 둘러싸고 발생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바다가 국가간 이익의 충돌 및 분쟁발생의 주무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땅은 이미 고정된 국가간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이 관계를 새롭게 변경 시키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이익보다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고, 하늘은 지배 및 소유의 개념을 적용시킬 정도까지 기술발달이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으로 되기까지는 아직 요원하다 할 것이다.

이에 비해, 바다는 오늘날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자원고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최후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 또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다가 국가간 분쟁발생의 주무대가 될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땅에서 태어나 육지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육지는 인구폭발로 만원이고, 부존자원은 점점 바닥이 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과학발달에 힘입은 자원의 무한정한 개발은 지구의 환경까지 파괴, 풍요로운 인간의 삶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식량원이 되는 각종 어족자원과 석유 및 천연가스과 같은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수요의 증대는 국가간 첨예한 이해대립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 세계가 잡고 있는 어류는 약 1억톤 정도이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곡물을 통해 생산하려면 약 5억톤의 곡물이 필요하다고 한다. 만약에 지상에서 삼림을 개간, 농장을 새롭게 만들어 그 5억톤 정도의 곡물을 더 생산하려 한다면 지구는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극도로 황폐화되고 말 것이다.

이는 곧 바다란 더 이상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인류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최근에 각국의 국가정책에서 단순한 활용의 대상에서 소유의 대상으로 변모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아·태지역에서 전쟁을 예고하는 최초의 포성은 해양으로부터 울려 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칼더 교수가 아·태지역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묘사하기 위해 제시한 죽음의 삼각형 논리⁴⁾를 보면 왜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었는지 알 수 있다.

4) Kent E. Calder, 『Asia's Deadly Triangle : How Arms, Energy and Growth threatens to destabilize Asia Pacific』(London : Nicholas Brealey Publishing Co., 1996), p. 5.

지난 20여년간 역내 국가들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은 육상의 부존자원을 빠른 속도로 고갈시켜 왔으며, 육상 부존자원의 급격한 감소는 이어서 해양에서 대체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해양관할권을 확대하게 만들었다.

또한 해양관할권의 확대를 둘러싼 역내 국가간의 마찰과 경쟁에서 각 국가들은 주도권 확보를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해군력을 앞다투어 증강하게 되었다.

하지만 상호 경쟁적인 해군력 건설은 육상 부존자원의 고갈을 더욱 촉진시키게 되고, 이는 곧 해양에서 대체자원의 확보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게 되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기선 쟁취를 위한 역내 국가들의 노력은 또다시 역내 해군력의 증강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역내 각 국가들은 현재 육상 부존자원의 고갈을 초래하는 경제발전, 경쟁적인 해양대체자원 개발 및 확보 또한 그러한 경쟁에서 주도권 유지를 위한 힘의 우위달성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 세 요소를 무한정 추구할 수 있는 입장도 더더욱 아니다. 왜냐하면 포기한다면 주변국에 비해 열세한 입장을 면치 못할 것이고, 무한정 추구하다 보면 악순환의 반복, 그 누구도 원치 않는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인의 딜레마에서도 입증되듯이 어떤 행위를 하여도 위험하고, 하지 않아도 똑같이 위험할 때는 결국 하는 쪽을 택하게 된다. 즉, 현재 역내 국가들은 해군력 증강을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군비증강은 역내에서 안보딜레마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란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건설해도 불안은 더욱 가중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건설한 군사력에 대해 주변국은 전보다 더 위협을 느껴 불안을 덜고자 대응군사력을 건설하게 되고, 이는 또다시 상대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게 하여 추가적 군사력 건설을 더 부추기게 하는 등 이 두 경쟁자는 상호 원치 않는 군비경쟁을 계속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분쟁발생의 개연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결국 아·태지역은 칼더 교수가 지적하였듯이 육상자원 고갈, 해양대체자원 확보 경쟁, 해군력 건설경쟁이라는 이 세 요소간의 상호 악순환에 의하여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가 증폭, 해양에서 분쟁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제부터 설명할 동북아 주요국가들의 해군력 증강 사례는 이와 같은 안보딜레마가 단순한 이론상의 가설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2. 동북아 주요 국가별 해군력 증강 사례

중국은 과거 연안해군(Coastal navy)으로 평가되어 왔던 자국의 해군력을 가까운 시일내에 장거리 투사 및 출동능력을 갖춘 이른바 원양 또는 대양해군(Blue-water navy)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궁극적으로 항공모함의 보유까지 포함한 지속적인 해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수상함의 경우 작년 1월 러시아 건조 8,000톤 규모의 소브레메니급 대형 구축함 1척을 인수한 이래 금년 2월중 또 다른 1척을 인수했으며, 이외에도 동급 구축함 2척을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바, 가까운 시일내에 소브레메니급 대형 구축함 4척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⁵⁾

소브레메니급 구축함은 발진속도가 매우 빠르고 파괴력이 높은 대함 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여 항공모함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은 자신들이 설계한 또 다른 중·대형 구축함도 건조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야심적인 잠수함 증강계획의 일환으로 러시아로부터 모두 8억불 상당의 예산을 들여 디젤-전기 추진식 킬로급 잠수함 4척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에 보유한 로미오급 잠수함도 신형의 송(Song) 및 명(Ming)급 잠수함으로 대체하고 있다. 특히, 핵탄두 및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⁶⁾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2~3년 전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특정기능을 갖춘 함정을 보강하는 대규모 방위력 정비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수상함의 경우 1998년 4척의 쿡고급 이지스 구축함을 실전에 배치한 이래 5,000톤 규모의 무라사메급 구축함 도입계획에 집중, 수년내에 최소한 8척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배정을 완료하였으며, 1만톤 규모 이상의 오스미(Osumi)급 대형 수송선(LPD) 3척 및 13,000톤급 항모형 호위함 4척의 확보계획을 확정 한 가운데 금년중에 1척을 건조할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중함의 경우 3,600톤 규모의 오야시(Oyashi)급 재래식(디젤-전기엔진) 잠수함을 건조하여 2척을 이미 실전에 배치하였으며, 2007년까지 8척을 추가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5) 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문제 분석』, 2001, p. 1.

6) ibid., p. 2.

일본의 새로운 함정 건조계획중 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은 오스미급 대형 상륙함이다. 상기 함정은 전후 처음으로 헬리콥터 및 전투기 등 비행기의 탑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일본이 궁극적으로 항공모함 보유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의 국내보도에 따르면, 새롭게 건조되는 호위함은 대잠수함 헬기와 수송기 등을 탑재하여 긴급시 병력수송, 유엔 평화유지활동지원, 재해지역 인원파견 등 다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일본은 또한 금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방위력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도 비해 0.4% 증액된 4조 9,552억 엔을 배정하여 대잠수함 초계기 P-3C의 후속기 개발 및 장거리 공중급유기 도입 등 전반적인 방위력 증강을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호위함 건조 등 해군력 확대가 이같은 방위력 정비의 중심이 되고 있다.⁷⁾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및 국내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잠수함 및 수상함의 전력이 1990년대 초에 비해 약 80% 감소되었으나, 최근 푸틴 대통령에 의한 신 「국가안보개념」 발표(2000.1.14) 및 신 「해군교리」(New naval doctrine) 채택(2000.3.4)에 따라 해군력 복원 및 강화를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⁸⁾

신 「해군교리」는 러시아가 향후 해군력을 집중 육성하려는 전략적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교리는 첫째, 세계 해양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보장, 둘째, 최근 이라크에 대한 봉쇄 일환으로 걸프지역에서 행해진 미국 해군에 의한 러시아 상선대의 진입 억제와 같은 러시아 및 러시아 동맹국에 대한 차별적 행동방지, 셋째, 해양이용에 관련된 문제발생시 러시아에 유리한 분쟁해결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러시아는 국내 경제사정상 신 「해군교리」에 따라 즉각적인 해군력 증강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러시아는 앞으로 노후 공격용 잠수함 및 수상함의 대체, 해상 및 연안기지에 근거를 둔 다기능 항공기의 개발, 전투준비태세의 현대화를 통한 신속대응군의 신설 등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극동함대의 세력도 증강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8월 바렌츠해에서의 핵잠수함 쿠르스크호의 침몰 사건도 해군력 재정비 및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9~2000』, p. 145.

8) ibid., p. 125.

대만은 독립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무력공격 위협과 함께 최근 러시아로부터 소브레메니급 구축함을 도입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보유의 어떤 함정보다도 큰 규모인 키드(Kidd)급 구축함 4척의 판매를 미국 부시 행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⁹⁾

1979년 제정된 미국의 「타이완 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의하면 미국은 대만의 방어를 위하여 타이베이 정부를 지원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에 비해 보다 더 확고하게 상기 법의 준수를 언급해 왔기 때문에 대만의 요구는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¹⁰⁾ 참고로 클린턴 대통령은 작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이지스 레이더 체계가 탑재된 얼레이버크 구축함의 대만 판매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대만은 또한 키드급 구축함 요청과는 별도로 2005년부터 6,000~8,000톤 규모의 이지스 구축함 4척의 건조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대만은 이미 1998년에 6번째 라파엣급 프리깃함을 도입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다양한 급의 프리깃함 도입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이다.

한편 북한의 해군력 증강계획은 체제 특성상 자세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1996년부터 1,000톤 규모의 신형 로미오급 잠수함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1999년 6월 연평해전에서의 패퇴 이후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듯하다.

3. 미래 해전 패러다임의 변화

미래 해전의 양상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구체적인 해양의 위협과 1991년도 걸프전과 1999년도 유고전의 경험을 상기할 때 미래 해전양상을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다.

첫째, 미래 해전은 광역의 다차원 공간에서 전개될 것이다. C⁴ISR 체계의 발달로 실시간 전장상황 및 표적정보 판단이 가능하며, 센서와 결합된 원거리 정밀타격수단

9) 외교안보연구원, op. cit., p. 4.

10) ibid., p. 5.

의 사용으로 해양전장은 더욱 확장될 것이며, 수상·수중·공중·우주·사이버 등 다차원의 전장공간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¹¹⁾ 나아가 해양전장은 바다로부터의 해군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상전장의 연안지역까지 확장될 것이다.

둘째, 미래 해전은 정보우세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된 상태에서 우세한 기동으로서 결정적인 공격력을 동시에 집중시켜 적을 무력화하고, 신속히 분산하는 전쟁형태를 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작전은 모든 전투의 필수요소가 될 것이며, 장거리 정밀유도무기를 이용한 선제 정밀공격이 일반화될 것이다.¹²⁾ 또한 유사시 결정적 공격력을 신속하게 전구로 이동시킬 수 있는 해상수송능력의 확보와 전투시 신속 은밀한 기동력과 적을 결정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첨단 무기체계를 탑재한 플랫폼의 운용이 중시될 것이다.

셋째, 미래 해전은 단순히 해양통제권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이를 바탕으로 해군의 결정적인 공격력을 지상전장으로 투사하여 전승의 유리한 여건조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행될 것이다. 2020년경에는 대륙간 거리에 위치한 표적도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해양으로부터 지상작전에 대한 전투력 투사의 범위 및 영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통제의 개념은 해군전력에 의해 전투가 전개되는 연안의 전장공간을 포함하는 전투공간 지배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다.

넷째, 비대칭작전의 수행이다.¹³⁾ 미래 해전에서는 상대방의 약점이나 아측의 장점을 최대로 활용하여 적을 무력화하는 비대칭전의 수행이 보편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해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전략적 차원에서 비대칭 수단을 건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여기에는 잠수함 및 수상함에 의한 장거리 정밀유도무기 공격능력, 정보작전능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섯째, 미래 해전에서는 전방위 방호를 중시할 것이다. 미래전에 있어서 무기체계의 파괴력과 정밀도 및 사거리는 상상을 뛰어넘어 신장될 것이다. 따라서 주요 전

11) Martin Van Creveld, 『The Transformation of War』(New York : The Free Press, 1999), p. 25.

12) ibid., p. 32.

13) Geoffrey Regan, 『Blue on Blue : A History of Friendly Fire』(New York : Avon Books, 1999), p. 46.

투력은 전장으로 이동 및 작전을 수행하는 전기간 그리고 위협에 있어서도 적 주력뿐만 아니라, 비대칭전력에 의한 공중·수중·사이버 위협 등 모든 종류의 위협으로부터 방호되어야 한다.

여섯째, 작전의 지속성과 합동성이 강조될 것이다.¹⁴⁾ 미래 해전에서는 전쟁/전략의 목표를 달성 또는 작전 변경시까지 해당작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전쟁지속능력과 전구내 적시·적소 군수지원능력이 고려되어야 하며, 전투효과를 동시적·다차원적으로 통합하는 합동작전이 중시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재·적소·적량의 군수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군수정보체계와 기동군수지원부대가 필요하며, 합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호환성이 있는 지휘통제체계 및 교리/작전절차 등의 발전이 요구된다.

Ⅲ. 미래에 대비한 해군전략

1. 평시 : 적 도발 억제

한국 해군의 전략목표는 당위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곧 적 도발의 예방이며, 도발이 발생했을 시 이를 저지 및 격퇴하여 국가를 온전히 보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평시 군사력을 활용하여 예상되는 적의 도발을 비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략적 상황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방법 중 하나가 억제이다.

미래의 한국 해군은 보복적 억제, 거부적 억제 그리고 협력적 억제를 수행해야 한다. 보복적 억제는 잠재적 침략국에 대하여 만일 그들이 침략행동을 시작한다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위협에 의하여 그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침략을 자제시키는 전략개념이며, 거부적 억제전략이란 잠재적 침략국의 한정적 침략에 의한 특정 전략목적 달성을 거부하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침략을 기도하지 않도록 하는 개념이다.

보복 또는 거부적 억제가 적 침략을 억제시키기 위한 자국 중심의 접근방법인 반면에 협력적 억제는 미국과 같은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분쟁 및 전쟁을 억제하는 개념이다.

14) 『Joint Vision 2010』, 1997.

억제는 C³I라는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즉, 응징 용이든, 거부용이든 실제로 억제가 실패한 이후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Capacity),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겠다는 단호한 정치적 의지(Intention) 그리고 사용의지를 감재적 침략국에게 확실히 전달(Communication)하는 것, 마지막으로 억제자가 군사력 행사의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도록(Credibility) 하는 것에 의해 억제의 성공 여부는 결정된다.

먼저 보복적 억제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이다. 해군의 함대는 그 자체가 움직이는 목표물이기 때문에 타군에 비해 적의 선제로부터 비교적 높은 “생존성”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은밀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수중의 잠수함은 적의 선제공격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적에게 최대의 위협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다.

또한 함대는 러시아 해군의 속담인 ‘Seven feet under the keel’ (함정 최하단인 용골로부터 약 2m 이상되는 수심만 있으면 항해 가능)처럼 배가 항해 가능한 바다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이든 접근할 수 있는 기동성 및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타군에 비해 억제력을 더욱 신뢰성 있게 행사할 수 있다.

결국, 해군은 무해통항의 자유와 함께 군사력 주둔에 관련된 문제들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장소와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억지능력(Capacity)을 다양한 전개방법(Intention & Communication)을 통해 가장 신뢰성(Credibility) 있게 위협을 행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복적 억제를 가장 실효성 있게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평시 적 해양도발을 거부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함정을 해양 인계철선전력(Sea Tripwire Forces)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원래 인계철선(Tripwire)이란 1950년 및 1960년대 NATO 중앙전선에서 배치된 미국의 재래식 병력의 억제 역할에 관련된 명제였다.¹⁵⁾

미국은 당시 대량 보복전략을, 즉 아무리 사소한 침략행위라 할지라도 발생 즉시 핵공격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위협, 침략행위 그 자체를 단념토록 하는 것을 미국의 공식 억제교리로 채택하였다.

15) Milan N. Vego. "Naval Operational Art", 『Navel War College Review』, Naval War College, January 1995, p. 1.

하지만 서구 자유진영, 특히 구서독의 영토 중 일부가 단지 침략으로 빼앗긴다고 할 때 과연 미국이 핵을 사용하여 보복할 것인가에 대해 대부분은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으로는 보다 신뢰성 있는 구체적인 억제조치가 필요하였던 바, 그것이 바로 인계철선용으로 병력을 전방에 배치하는 것이었다.

비록 상징적이지만 일정 규모의 병력을 전방전선에 배치시켜 놓은 상황에서 적이 만약 침략 의사가 있다면 전방배치된 미국의 병력부터 격멸해야 하는바, 미국은 이를 명백한 침략의사의 표명으로 해석하고 개입의 명분으로 삼아 전술핵을 사용하여 반격하겠다고 서부유럽의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자 하였다.¹⁶⁾

즉, 미국이 서부유럽 전선에 주둔시켰던 병력의 규모는 적이 침략시 그 규모만을 가지고 싸워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밟으면 자동적으로 폭발하는 도화선(Tripwire)처럼 전장에 배치된 상징적 병력의 일부분이라도 적에 의한 명백한 침략으로 손상을 당하게 될 때 미국은 자동적으로 개입하여 확전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결국 인계철선전력에 대한 손상이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만큼 전방에 상징적 규모로 배치된 전력의 존재 자체가 적 도발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계철선전력의 운용으로 억제를 달성하겠다는 미국의 전략개념 역시 신뢰성 측면에서 또 한번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문제는 인계철선전력의 규모였다. 즉, 소규모, 그것도 상징적 수준의 전방배치 전력이 적에 의해 공격을 당했다 해서 확전과 전면전을 불사하고라도 과연 미국이 자동개입, 격퇴하겠느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또 한번 대두되기 시작했다.¹⁷⁾

한편으로 전방에 배치된 상징적 수준의 소규모 부대가 적에 의해 공격을 받을 때, 적이 꼭 침략할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확전이나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 적과 전방배치 인계철선전력 사이에 우발적인 사태가 얼마든지

16) David Robertson, 『A Dictionary of Modern Defense and Strategy』(London : Europa Publications Limited, 1987), p. 310.

17) *ibid.*, pp. 311~312.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¹⁸⁾ 물론 단순한 우발사태를 침략의 시작이라고 일방적으로 판단, 자동으로 개입하여 확전을 할 미국은 절대 아니었다. 당시 미국의 입장은 이러한 우발사태시 확전을 위한 개입보다는 확전없이 현장에서 해결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우발사태라고 단정, 확전을 위한 개입을 자제할 때 이 또한 적에게 오히려 선제의 빌미를 제공, 결과적으로 역제가 쉽게 깨질 수도 있다는 또 다른 우려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전선에서 적과의 충돌이 단순한 우발사태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침략의 시작인지 구분을 해야 했던 바, 전방에 주둔시킬 인계철선전력의 규모를 증가시킴으로써 그러한 구분을 용이하게 하였다. 즉, 방자의 전력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자는 침략시 그만큼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한다면 이는 방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단순한 우발사태가 아니라 명백한 공격행위라고 간주할 수 있고, 적 선제에 의해 당한 규모 또한 결코 작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개입, 확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한미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주한미군의 규모는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 가들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 미 본토로부터 추가적인 증원없이 현재의 전력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단지 유사시, 즉 주한미군이 공격을 당할 때, 미 본토 또는 다른 전구에 주둔중인 미 병력의 자동적인 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전력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일 뿐이다.

이러한 인계철선전력을 이용하여 거부적 억제를 달성하겠다는 기본개념은 한국 해군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현재 한국 해군은 평시 적 해양도발 억제를 위해 일정수준의 함정을 지정된 해역에 배치시켜 경비세력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비세력의 배치목적이 명백한 또는 잠재적 적에 의한 해양도발을 억제하려는 것인만큼 이러한 경비전력이 신뢰성 있는 거부적 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해양인계철선전력(Sea Tripwire Forces)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 해양인계철선전력 개념을 억제에 적용한 사례는 Harold J. Kearsley, 『Maritime Power and Twenty-First Century』(Dartmouth :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imited, 1992), pp. 96~101에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해양에서의 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억제전력으로 해군함정들을 전방 및 측방해역에 배치하여 인계철선전력 개념으로 운용할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억제의 신뢰성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즉, 적 세력이 경비중인 우리의 함정들을 공격할 때 우리의 영토에 대한 공격의 시작이라고 간주, 대기중인 전가용전력을 자동적으로 현장에 투입하여 결전을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평소에 천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마치 미국이 인계철선전략을 서부유럽에 최초 적용시 봉착했던 여러 판단상의 딜레마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현재 잠재적 분쟁해역에 띄워 놓은 FFK나 PCC 몇 척이 도화선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도 빈약하다 할 수 있다. 즉, 밟으면 자동으로 터지듯이 이러한 전방배치 함정이 조금이라도 당하면 즉각 투입가능한 전전력으로 자동개입, 확전하겠다는 위협은 말만큼 신뢰성 있게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해양인계철선전력이 주변국 함정에 비해 전투능력이 열세하고 수적인 규모 또한 작을 때, 적 해양도발의 창들의 높이는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¹⁹⁾ 게다가 미국의 사례처럼 배치된 전력이 규모나 수준면에서 작으면 작을수록 현장에서의 충돌이 단순한 우발사태인지 아니면 의도적이고 본격적인 침략행위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²⁰⁾

따라서 이러한 거부적 억제를 보다 신뢰성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소에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이 예상되는 해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함대전력을 현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단위함별 전투능력도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한국 본토의 침략 또는 도서침탈과 관련하여 해양에서 국지적인 전투를 하고자 할 때 최초로 조우, 교전해야 할 대상인 우리의 함정세력이 규모나 전투력 수준에서 일정수준 이상이 유지될 때 적은 그만큼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이 우리의 해양인계철선전력을 공격한다면 이는 곧 명백한 적대행위로 간주, 대기중인 우리의 전전력을 도발현장에 투입하여 확전까지 해야 한다는 명분이 더욱 뚜렷하게 될 수밖에 없다.

19) 정삼만, “기동전 사상의 한국 해군의 적용”, 제2회 전투발전 세미나 발표논문집, 전투발전단, 2000, pp. 8-30~8-32.

20) *ibid.*, p. 29.

특히, 함정은 그 자체가 떠다니는 영토로서 대형함인 경우 일개 국가의 자긍심의 원천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상징성이 크다. 만약 장차 기동함대의 주역이 될 우리의 대형함들에 대해 적이 선제공격할 때 국가이익보다는 국가위신을 먼저 고려, 전면적으로 확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형함보다는 대형함, 소규모보다는 대규모의 함대전력을 현시시켜야 개전 초 아축의 피해정도가 일정수준 이상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아축의 결전 및 확전의 개연성이 더욱 증가되기 때문에 확전을 싫어하는 적은 아예 처음부터 도발을 자제하게 될 것이다.

바꾸어 표현하면 전방해역에 상대적으로 전투능력이 열세한 함정 몇 척을 배치해 놓는다면 이는 결국 적 도발시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희석되었음을 적으로 하여금 인식케 하여 오히려 적에게 도발의 빌미를 제공, 결과적으로 억제의 실패로 연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확실히 적 도발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Tripwire 개념으로 세력 규모나 단위함 전투수준면에서 도발을 시도하려는 적에게 충분한 심적인 거부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함정세력을 배치해야 한다.

다음으로 함정의 전진배치(Forward presence)를 이용, 보복적 억제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부적 억제의 구현에 관한 것이다.

현재 동북아에서 가장 좋은 선제수단은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에 대해 이론은 없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스커드, 노동 1호, 대포동 미사일, 중국이나 러시아의 전략지대지 미사일 등은 우리의 수도, 인구밀집도시, 경제 및 산업중심지, 기타 군사 주요기지 등을 이미 사정권내에 두고 있으며, 일본 또한 H-2 로켓 발사기술 및 ICBM 관련기술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개발, 주변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실정이다.²¹⁾

문제는 우리의 전·후방 전략목표 중 하나가 이러한 탄도미사일에 의해 선제를 당했을 때 과연 보복적 억제의 논리대로 상대에게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안겨주기 위한 응징보복을 할 수 있겠는가이다. 물론 보복적 억제는 우리의 응징보복이 두려워 선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신념체계와 관련있는 교리차원의 대응개념이다.

21) James Adams, 『The Next World War-Computers are the Weapons and the Front Line Is Everywhere』(New York : Simon and Schuster, 1998), p. 89.

교리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보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치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는 나라일수록 보복적 억제는 더 실효를 거둘 것이며, 반대로 정치적으로 별 부담을 느끼지 않는 나라일수록 보복적 억제는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해 결국 실패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²²⁾

더구나 선제를 당한 후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유발시켜 종국적으로 전면전으로 치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위와 같은 탄도미사일의 공격을 당했을 시 전면전을 불사한 보복을 해야 할 것인가 또는 단념해야 할 것인가 중에서 양자택일을 고통스럽게 해야 할 줄도 모른다.

과거의 게임이론가들 역시 미·소간 상호 전략적 안정을 유지했던 보복적 억제전략의 일종인 상호 확증파괴 전략을 모의실험해 보았다. 결과는 한쪽이 선제를 당했을 때 함께 공멸의 길에 이르더라도 보복공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당한 그 상태에서 선제자와 협상을 할 것인가 중에서 양자택일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당한 쪽은 결국 후자를 택했다는 것이었다.²³⁾

마찬가지로 이러한 게임이론적 시각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마치 미국이 그러한 보복적 억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SDI란 수단을 이용한 거부적 억제로 방향전환했듯이 우리도 주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 보다 확실한 거부적 억제체계를 구축해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다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거부적 억제란 앞에서 일별했듯이 아축의 강력한 방어 또는 거부전력으로 침략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이 침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크게 됨으로써 침략을 포기케 하는 것이다. 우리는 탄도미사일 억제를 위한 거부 또는 방어체계를 지상이나 해상중심으로 구축할 수 있다.

해상중심의 방어체계는 지상중심의 것보다 선제나 보복공격에 대해 훨씬 덜 취약하고 한국의 연안따라 배치된 인구 및 주요 산업밀집지역을 기동성을 이용, 지상체계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방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적 방위에서 적 탄도유도탄을 보다 조기에 탐지 요격할 수 있다.

22) *ibid.*, pp. 45~48.

23) Mark Bowden, 『*Black Hawk Down-A Story of Modern War*』 (New York : Atlantic Monthly Press, 1999). p. 156.

또한 해상에서 미사일 요격시 미사일 잔해, 방사능 또는 생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가 육상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공자의 입장에서는 해상중심 방어체계보다는 지상중심 방어체제로 대응하는 방자에 대해 더욱 도발의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를 위협하는 탄도미사일의 진원지는 바다 건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안마당이 아닌 미사일 발사국 근해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그러한 미사일 공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탐지 및 요격능력이 뛰어난 함정을 거부적 억제체제로서 전진 배치시켜 놓는다면 적은 우리가 보복적 억제체계를 유지할 때보다 훨씬 더 부담을 가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선제 자체를 더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해군은 자체의 기동성과 융통성을 이용, 보복적 억제의 수단일 뿐 아니라 상대에 따라 보복적 억제를 적용하기 곤란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거부적 억제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거부적 억제개념의 구현수단으로서 한국 해군의 중요성은 또한 우리의 지리적 전략적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 국토는 인구 및 산업밀집지역, 발전시설 등이 임해지역에 위치한 남북의 긴 종심과 동서의 짧은 종심의 세장형 반도이기 때문에 바다로부터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더구나 현대 무기의 정밀성, 장사정, 대규모 파괴력 등을 고려할 때 적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원거리 바다에서 우리의 내륙 전종심에 걸쳐 정밀한 공격을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바다는 이제 우리에게 전략공간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바다의 상실은 곧 전략적 패배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바, 전략적 후퇴가 사실상 불가능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평소 해군으로 하여금 충분히 이격된 종심깊은 해역을 방어하도록 해야 할 입장이다.²⁴⁾ 결국 평소 해군함정의 전진배치로 적의 선제나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 또는 거부하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강력하게 되면 적은 그만큼 선제공격을 단념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협력적 억제(Cooperative Deterrence)로서 이는 미국 등과 같은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분쟁 및 전쟁을 억제하는 전략개념이다. 협력적 억제를 달성하는 방법을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4) 정삼만, op. cit., p. 8-33.

우선 전면전 도발시 강력한 연합전력을 형성, 적 중심에서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도 있음을 위협함으로써 적 도발 자체를 단념시키는 방법이다. 물론 여기에서 적 중심에 대한 공격은 바다로부터의 대육지 전력투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유사시 동맹국 또는 연합국과 함께 육지에 대해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군은 수상함, 잠수함, 상륙군, 장거리 미사일, 해상 항공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해군일 것이다.

협력적 억제를 달성할 수 있는 두번째 방법은 다국적 안보협력에 참여함으로써 국가간 신뢰를 구축하여 전쟁이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다. 특히, 동·북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은 해양을 경계로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역내 국가간 안보협력을 위한 유일한 장소는 바다일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바다에서의 안보협력, 즉 국가간 해양안보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또한 해군일 수밖에 없다.

현재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재해방지, 재난구조, 대민지원 등의 인도적 지원분야, 해적행위, 불법이민, 마약밀매 등의 국제범죄 분야 그리고 해양환경 오염, UN 평화유지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조 및 지원을 통해 국가간 상호 신뢰형성 및 우호협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전쟁 및 분쟁 방지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평소 주변국과 군사, 비군사적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주 수단은 해군일 수밖에 없다.

2. 국지도발시 : 확산 방지 및 유리한 조건하 분쟁 조기 종결

한국 해군이 국지도발과 관련하여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은 유연반응전략(Flexible Response Strategy)이다. 유연방응전략은 각종 도발의 양태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각종 도발 그 자체에 대한 억제를 추구할 뿐 아니라 억제가 실패시 도발의 무제한적인 확대를 피하면서 분쟁해결을 위한 교섭을 포함한 제반조치를 강구하려는 정치 군사적 방책을 의미한다.²⁵⁾ 즉, 유연반응전략이란 억제와 방위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선택성과 신중성, 신속성 및 통제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의 무기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목표와 무기 및 공격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5) 국방대학원, 『안보관계용어집』, 1994, p. 129.

이처럼 유연반응전략은 국지분쟁을 억제하고 또한 분쟁발생시 보다 신속적으로 대응하는 복합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상 유연반응전략에서 억제개념은 고려하지 않고 분쟁발생시 확산방지 개념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보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 여기에서 잠시 미국이 적용했던 유연반응전략의 기본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54년 적의 사소한 도발행위일지라도 응징수단으로서 강력한 전략 핵무기로 보복하겠다고 위협, 여하한 도발이라도 억제시키려고 했었다. 이 전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시 미 국무장관 존 딜레스의 대량보복전략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미국은 소련을 위시한 공산진영에 의한 침투, 전복, 게릴라 분쟁과 같은 소규모 도발에도 당초 약속대로 핵을 이용한 응징보복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 미국은 신뢰성 문제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소규모 도발을 억제시키려면 거기에 상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당시 대규모 핵전략만 있었지 분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상전력은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미국은 파리가 날아들면 대포로 쏠 것이(대량보복전략) 아니라 파리채로 잡아챌다는(유연반응전략) 보다 현실적인 전략을 택해, 현장에서 방어 및 결전을 수행할 수 있는 통상 재래식 전력(여기에는 전술 핵도 포함)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처럼 유연반응전략이란 여하한 도발에 대해서도 거기에 상응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결전의 방법과 수단을 갖추으로써 그러한 사소한 도발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²⁶⁾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시에는 확산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유리한 조건하에서 분쟁의 조기종결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도서 영유권 관련 주변 불특정 국가들과의 국지적 수준의 잠재적 해양분쟁에 얼마든지 연루되어질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먼저 이러한 국지적 도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구체적 결전의 방법으로서 1900년 정치적 수완과 행정능력이 뛰어난 독일 해군상 터피츠(Alfred Von Tirpitz)가 영국 해군에 대항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개한 『위협이론(Risk Theory)』²⁷⁾을 적용해 보자.

26) Richard A. Gabriel, 『Military Incompetence : Why the U.S. Military Doesn't Win』(New York : Hill and Wang, 1985), p. 55.

27) Edward M. Earle, 『Makers of Modern Strategy : Military Thought from Machiavelli to Hitler(1943)』, 육군본부(역), 『현대전략사상가』(서울 : 육군본부, 1975), p. 371.

위협이론에서 등장하고 있는 함대는 『위협함대(Risk Fleet)』이다. 위협함대의 운용이론은 비겁자 게임이론(Chicken Game)²⁸⁾의 논리적 구조와 비슷하다. 비겁자 게임은 미국의 과격한 십대 소년들이 즐기는 게임으로서 도로의 중앙에 흰줄을 긋고 양측에서 서로 마주보는 두대의 차로 하여금 최고의 속력으로 질주하게끔 해놓고 그 후 어느 한편이 겁이 나서 차의 방향을 바꾸면 바로 그 사람이 겁쟁이, 즉 비겁자가 되어 결국 패자로 인정되는 게임이다.

하지만 일단 부딪치면 상호 공멸하는 그러한 촉박한 시간제한 속에서 한쪽은 승리라는 명예를, 다른 한쪽은 비겁자란 오명이지만 그래도 생존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오늘날 이 게임이론은 억제논리에 많이 원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마치 Chicken Game 이론에서 한쪽에서 술을 마신 후 눈을 가리고, 브레이크를 고정시키고, 핸들을 제거한 후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앞으로 질주를 함으로써 결국 상대로 하여금 물러나게 하듯이 장차 한국 해군도 주변의 불특정 위협국 해군과 국지분쟁에서 해양결전이 불가피할 때 상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세력과 함께 자멸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나아가야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결전에 의한 손실로 역내에서 줄지에 제2 또는 제3인자로 전락될 수도 있는 모험보다는 오히려 비겁자란 불명예스런 이름과 함께 제1인자란 자리(현상유지)를 계속 지키는 것을 택하려 할 것이다.

장차 한반도 주변국들은 상호 협력적 관계보다는 경쟁적 또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지적 분쟁시 우리는 이러한 역내 역학관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타격력이 우수한 수단으로 국지도발 상대국 해군력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결과적으로 제3국이 전보다 더 위협적이 되어 도발국가에 대해 어부지리를 취할 수도 있음을 인식시킨다면 상대는 그만큼 국지적 분쟁을 더 단념하게 될 것이다. 즉, 어느 누구도 한국 해군과 교전, 절름발이가 되어 상대적으로 이웃 경쟁국가가 자신에게 전보다 더 위협적이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에 이러한 개념으로 운용되는 결전능력이 뛰어난 군사력을 WILD CARD라 부르고 있다.

28) John Spanier, 『Games Nations Play』(Washington, D.C. : A Division of Congressional Quarterly Inc., 1993), pp. 23~31에 비겁자 게임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음.

다음으로 억제가 실패하여 일단 국지분쟁이 발생하면 우리의 목표는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아측에게 유리한 조건하에서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다.

국지적 분쟁에서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적도 원치 않는 확전을 감행하겠다는 사생결단의 의지와 이러한 의지가 신뢰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용수단에 대한 적절한 운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때 확전의 위협으로 분쟁을 아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기에 종결지으려 할 때 고도의 유연하고 지혜로운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이미 앞에서 Chicken Game의 예와 함께 설명했듯이 상대는 최소한 우리와 전면전은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확전위협을 통한 분쟁현장의 통제를 위해 상대의 중심을 목표로 선정시 무턱대고 전략적 중심만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한다면 이러한 위협은 신빙성이 없어 오히려 현장에 있는 아측 행동의 자유를 더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대의 전략적 중심은 파괴당했을 시 그렇지 않는 목표보다 확전을 더 쉽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확전 그리고 전면전이 두려워 현장에서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라는 것은 아니다. 유연반응전략에서는 분쟁발생 현장이 아닌 상대 중심 가까에서 분명히 상응한 목표의 타격을 위협, 결과적으로 현장에서의 확전방지 및 분쟁의 조기종결을 강조하고 있다.

계륵(鷄肋), 즉 먹자니 별로 뜯을 살이 없고 그래도 버리자니 아깝다는 의미의 뜻으로 사용된다. 만약에 계륵과 같은 목표의 타격을 위협한다면 상대는 피격시 전면전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가치는 없어 확전은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저 참으며 간과해 버릴 만큼 가치없는 그러한 목표는 더더욱 아니다. 이는 역설적인 발상이지만 상대의 전략적 중심보다는 계륵과 같은 가치가 다소 작은 목표에 대한 타격을 위협함으로써 분쟁현장에서 우리의 의지를 더 쉽게 강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연반응전략의 묘미는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 할 수 있다. 통상 이와 같은 분쟁 중 확전 억제전략(INTRA-WAR DETERRENCE STRATEGY)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은밀, 기동, 기습, 타격능력이 뛰어난 해군력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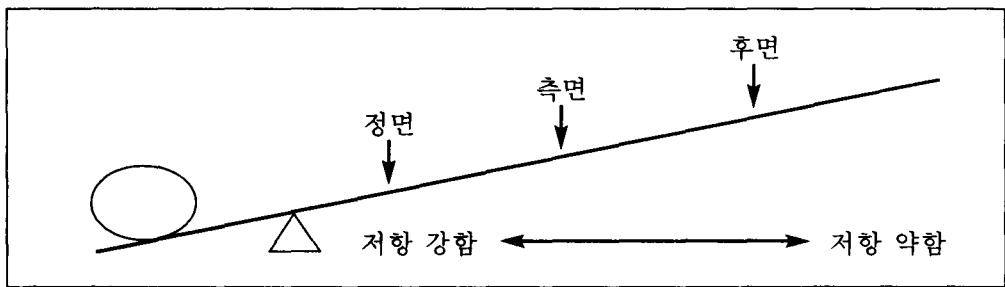
3. 전시 : 침략 조기 격퇴

손자병법에 나오는 『비여솔연(譬如率然)의 뱀』은 용처럼 머리에서는 유황불을 내뿜고, 입에는 독이 가득찬 이빨을 보유하고 있고, 꼬리 또한 강력한 힘과 맹독을 보유하고 있어 머리가 공격당할 때 꼬리가 자동적으로 달려들어 반격하고, 반대로 꼬리가 공격당할 때는 머리에서 유황불과 독니로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며, 몸이 당할 때는 머리와 꼬리가 동시에 달려들어 상대의 공격을 반격하는 전설 속의 동물이다.

이 비유에서 암시되는 바와 같이 통일 전에는 북한이, 통일 후에는 잠재 위협국들이 우세한 지상군과 해·공군을 이용, 공격해 올 때 마치 솔연의 뱀이 몸통이 공격당하면 독이 든 머리와 꼬리가 동시에 합세하여 공격하듯이 동·서해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한국 해군이 자동적으로, 거의 반사적으로 반격을 해서 격퇴를 해야 한다.

특히,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와 같은 세장형 전장에서 한국 해군은 기동전의 지렛대 원리를 이용, 우리의 국토를 유린하려는 적을 조기 격퇴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렛대의 원리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직접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거운 물체를 지렛대를 물리/역학적으로 이용, 손쉽게 들어 올리는 것이다.²⁹⁾ 다음은 한국 해군에 의한 기동이 어떻게 지렛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기동전의 핵심은 적이 예상치 않는 시간에 적의 강점이 아닌 약점에 자신의 전투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적의 약점은 장소면에서 지휘의 중추, 군사적 핵심, 중요한 지리적 위치와 같은 곳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지휘의 중추는 파괴되면 전투의지

29) 위 그림은 필자가 세장형 전장에서 해군의 유용성을 설명하기 위해 육군교육사령부, 『군사이론연구』, 1987, p. 454에 있는 그림을 응용한 것임.

및 자유가 마비될 수 있는 심리적 중추이며, 군사적 핵심은 파괴되면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힘의 중심이며, 중요한 지리적 위치란 점령당하면 자신이 아닌 적에게 행동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지형·지물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적의 이러한 약점들은 방향면에서 볼 때 정면보다는 측익·측방, 측익·측방보다는 후면·배후로 가면 갈수록 더욱 취약해진다.

즉, 지렛대 팔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적은 힘이 요구되듯이 중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적 저항이 점점 약해져 결과적으로 힘이 적게 들게 된다. 역으로 설명하자면 지렛대 팔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큰 힘이 발휘되듯이 적에 대한 공격시 공격중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결과가 더욱 결정적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해양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북으로는 중심이 길고 동서로는 중심이 짧은 전형적인 세장형의 전장환경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남북방향의 지형은 기동부대가 전진하면 할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는 평원지대가 아니라 제한된 도로망, 대소의 하천, 굴곡 심한 산악지대 등이 기동력에 제한을 가하는 조잡한 지형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상에서의 중심공격은 비록 국지 항공우세권을 장악하고 있더라도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전략적 입장이 항상 공격이 아닌 방어전쟁부터 치루어야 하는 것인 만큼 중심깊게 타격할 수 있는 항공기나 정밀유도무기와 같은 우리의 기동수단들은 개전 당시 적의 선제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략적 중심도 알아 우리의 국토에서 전투나 전략적 후퇴가 허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와 같은 세장형의 지상전장에 대해 바다는 그 자체가 기동공간이기 때문에 타군에 비해 적의 선제에 비교적 덜 취약하고, 적 측면이나 배후를 더 용이하게 공격할 수 있는 해군으로 하여금 적에 대한 중심공격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화력은 지렛대 원리처럼 배후 깊숙하게 찾아들어가 적의 약점에 해당하는 힘의 중심 등을 파괴, 전승 확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거리, 정확도, 파괴력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특성상 은밀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군에 비해 비교적 적은 저항에 직면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적 중심깊이 투사될 수 있는 해군의 화력은 작전적 수준(화력의 작전적 운용) 이상에서 기동을 대체(화력의 기동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침략에 대한 즉응공세는 해양통제권의 행사측면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적 조기경보 및 적 해상주력의 차단 및 격파를 통해 해양통제권을 조기에 확보하여야 한다.

Ⅳ. 어떠한 해군력을 건설해야 하는가?

1. 한국 해군의 현주소

한국군은 1950년 6·25전쟁의 휴전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을 계기로 대북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상군 전력위주로 건설하였으며, 경제적으로 많은 재원이 요구되는 해·공군 전력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국군은 대북 비정규전 위주의 전력 건설이 불가피하였고, 해군은 소형함정인 고속정 위주로 전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뼈아픈 시련을 겪었다.

한국 해군은 1995년 4월 제20대 해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한 안병태 제독이 「대양 해군 건설준비」를 최초로 주창한 이래 대양해군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나, 현재의 수준은 2,000톤급 이상 전투함 3척, 잠수함 12척(잠수정 3척 포함)으로 주변국인 중국의 잠수함 72척, 수상함 21척, 일본 잠수함 18척(훈련함 2척 포함), 수상함 49척, 러시아 극동함대 잠수함 34척, 수상함 145척(프리깃함 이상 10척), 미 7함대의 항공모함 2척, 잠수함 6척, 수상함 51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³⁰⁾

이러한 주변국들에 비해 한국 해군의 현 수준은 전력지수면에서 일본의 31%, 중국의 29%, 함정 총톤수상으로 일본의 40%, 중국의 39%이며, 전력가치면에서도 일본의 19%, 중국의 22% 정도로서 전력차가 크며 질적인 면에서 취약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³¹⁾

30) 『Jain's Fighting Ship 1999~2000』.

31) 『The Military Balance 2000~2001』 : James F. Dunnigan, 「HOW TO MAKE WAR」, 1996. 전투력 가치는 세계 각국(40개 국가)의 함정별 전투가치(무기, 장비, 임무수행에 대한 양적·질적 요소 고려 산출)의 총합을 비교한 것이다.

북한 해군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에 급급한 현실과 전반적인 취약점, 즉 제한된 성분작전 능력, 대공전의 취약성, 장기작전 능력의 제약, 광역초계 능력의 부족 그리고 특히 해상교통로 보호능력의 결핍 등을 감안할 때, 이 지역에서 국익을 보호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조선 수주량 세계 1위, 무역량 세계 12위(연간 2,810억불), 선박보유량 세계 9위(1,950만톤), 어획량 세계 8위 등 세계 해양강국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자원의 부족으로 대외무역 의존도(64.2%)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연간 수출입 화물의 99.7%를 선박으로 수송하는 한국은 해상교통로 보호가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라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1998년 산업연구원(KIET) 실물경제팀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15일 동안 해상교통로 차단시 각종 제철산업 마비로 제조업 및 건설업이 마비되고 식생활 및 대중교통수단이 제한되며, 15일 이상 차단시는 국가산업 및 경제활동이 마비되고 생필품 및 식량부족으로 심리적 공황 및 폭동발생으로 국가의 존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³²⁾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국 해군의 전력 수준은 유사한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들과 비교시 거의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적 위협에 대한 해상교통로 보호가 곤란한 전력수준이다.

이제 한국은 장기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주변국과의 마찰 가능성과 이로 인한 해양위협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 해군의 수준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주변의 안보상황과 해양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식과 수단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해양력 수준에 걸맞는 해군력, 해양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국익수호가 가능한 해군력 그리고 주변국 해군력 대비 전력 격차, 불균형, 취약요소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군력으로 발전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상의 전환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2. 전력증강 방향 및 수준

가. 전력증강 방향

해군은 1995년 이후 역대 참모총장들이 대양해군과 함께 입체전력 건설을 주창하여 왔다. 입체전력이란 해상·해중·공중·우주·사이버의 5차원 공간

32) 산업연구원/에너지 경제연구원, 『KIET 실물경제』, 1988. 4.

에서 입체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하에서 한국 해군은 21세기 복잡해지는 안보여건 속에서 확대되는 해양이익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대양해군」을 목표로 첨단 입체전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첨단의 정보통신, 컴퓨터기술 및 군사과학기술을 이용하여 5차원 전장공간에서 적보다 먼저 보고, 빨리 결심하여 원거리 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해상, 해중, 항공, 상륙 및 정보전력 등으로 구성된 전력을 건설하는 것이다.

또한 감시 및 정찰체계, 정밀타격/플랫폼 체계, 특수전력 및 지원체계를 지휘통제체계로 연결·통합하여 전투력 상승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시스템 복합체계(ISR+C⁴I+PGM/PLATFORM)의 전력을 건설해야 한다.

이러한 입체전력을 건설함에 있어 수상함 전력은 양적으로 주변국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으나, 질적으로는 대등한 수준의 전력을 건설해야 한다. 현대의 해군력은 상대적으로 열세한 해군은 바다로 나갈 수 없다. 실제로 포클랜드해전에서 아르헨티나 해군은 개전 초 순양함 벨그라노호가 영국 잠수함에 의해 격침된 이후 종전까지 아무런 해상활동을 할 수 없었던 사례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전투함 유형의 세계적 발전추세가 공중, 수상 및 수중의 입체적 고위협을 관리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혁신적 발전에 기본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해군은 질적 위주의 전력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동함대의 전력으로 이지스급 구축함(KDX-Ⅲ) 및 4,000톤급 구축함(KDX-Ⅱ) 이상의 전투함을 확보해야 한다.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중, 수상 및 수중 고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함대를 보유해야 하는바, 전투함은 많은 고성능 무기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항공작전 능력과 유도탄 공격능력 및 방어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수중전력은 우리가 전체적인 해군전력에 있어서 주변국과 대등한 수준을 건설하기 어려우므로 비대칭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전력이며, 미래 잠재적 위협 대비 발전시키고 있는 국가 전략무기체계 중 가장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무기체계이다. 따라서 우리 해군은 현 209급 잠수함의 부족전력 보완을 위해 잠항 지속능력 및 탐지/공격능력이 향상된 차기 잠수함을 확보하고, 국가 전략무기로서 가장 안정적이며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중잠수함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

항공전력은 해상전투의 입체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력으로 전장의 광역화 양상에 대처하고 북한 및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전력을 기능별로 증강 확보해야 한다. 대표적인 추진방향으로 주요 해상교통로 및 핵심해역에 대한 대잠탐색, 공격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해상초계기(P-3C)를 추가로 확보하고

해상작전 헬기의 성능 보강으로 대함/대잠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소해작전의 안전과 효율성을 고려 소해헬기의 확보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2차대전부터 여실히 증명된 바와 같이 항공우세 없는 해전의 승리는 있을 수 없으므로 전술항공지원 가능한 해상전술기 확보는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나. 전력증강 수준

일국의 해군력은 국가이익을 증진하고 국가방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해군력도 국가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고 국방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할 것이며, 전술한 전략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발전되어야 한다.

해군력의 수준 문제는 질과 양의 두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즉, 우리 해군은 주변국에 대하여 양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질적으로 대등한 전력을 보유함으로써 잠재적 주권침해 행위와 일방적인 국익강요를 저지할 수 있고, 침략을 감행시 선택적 핵심표적에 치명적인 손실 강요로 그 행동을 포기케 할 수 있는 『방위충분성 전력』의 건설이 필요하다.

한국 해군이 추구하는 『대양해군』은 미국과 같이 대형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전세계 어느 해양에서나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작전할 수 있는 해군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해를 벗어난 대양에서도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국가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춘 해군”으로 세력 규모는 최소한 구축함급 이상 전투함과 적정수의 잠수함 및 해상작전 항공기를 보유하고, 상륙함 및 기동군수 지원함을 보유하여 상당한 기간 대양에서의 독립작전 수행능력을 보유한 해군을 의미한다.³³⁾

한국의 해군력 발전은 국내·외의 정치적 및 군사적 상황과 국가의 경제력에 의하여 좌우될 것임에도 틀림없다. 즉,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국력에 상응하는 해군력을 건설해야 한다는 점이다.

폴 케네디 교수가 「강대국의 흥망」에서 “경제력보다 큰 군사력을 유지하는 나라는 쇠퇴”한다고 지적한 것과 같이 우리의 경제력 한계상 일본이나 중국과 1:1로 대항할 수 있는 규모의 해군력을 건설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세계 12위의 경제력(무역규모 세계 10위, 조선 수주량 세계 1위, 어획량 세계 8위)에 걸맞는 해군력 건설은 당연하다 하겠다.

33) 해군본부, “대양해군 관련 용어정의 정립 시달”(전투발전단, 2001), p. 11-4.

한국 해군이 건설하고자 하는 『대양해군』의 능력은 무작정 예산을 들여서 해군력을 키우자는 것이 아니라, 국력에 상응한 수준의 해군력으로서 결국 북한에 대해서는 질적 우세를 통하여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가지며, 주변국에 대해서는 평소에 주변국의 도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발시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의 해군력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3. 해군 무기체계 발전방향

첨단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전의 핵심개념은 네트워크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중심마비전의 개념이 될 것이다. 중심마비전은 적의 중심을 정확히 식별하여 공격하므로 최소의 희생으로 최단기간내에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기획가들이 추구하였던 전쟁수행의 기본목적이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탐지수단과 공격무기체계 등의 제한으로 중심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으나 이와 같은 제한점은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첨단 군사과학기술에 의해 점차 극복되고 있다.

중심마비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전장의 첨단 감시체계, 지휘통제체계, 타격체계를 네트워크체계로 결합시킬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할 것이다. 네트워킹의 가치는 단순히 전투요소를 상호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전투력을 갖는 새로운 군사력을 창출하는데 있다.

각 전투요소는 네트워크체계를 통하여 전장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지휘관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네트워크체계를 통한 각 전투요소들의 상호작용은 새로운 승수적 전투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미래 전장환경에서 전투능력은 먼저 적의 중심을 탐지·식별하여 행동을 결심하고, 적보다 먼저 원거리에서 정밀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미 해군이 발전시키고 있는 네트워크 중심의 미래전 수행개념은 네트워크가 전쟁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단적으로 설명하여 준다.

따라서 미래 해전에서 최대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협동교전능력(CEC)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신시스템 복합체계(ISR+C⁴I+PGM/PLATFORM)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네트워크체계 형성이 필수적이다.

가. 해양 전장감시체계

원거리에서 먼저 적의 중심을 탐지 식별하여 공격하기 위해서는 감시능력 향상 및 감시범위 확장을 통하여 전장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하여야 하므로 감시위성, 항공기 및 함정의 감시능력을 통합하여 방위권내의 3차원 표적정보를 실시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위협표적을 실시간 추적하여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방위권(EEZ)내의 모든 표적을 24시간 감시·정찰 및 조기경보할 수 있는 능력과 한반도로부터 바시해협에 이르는 한반도 주변의 주요 해상교통로상의 표적을 필요시 탐지 및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해군은 이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감시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첫째, 대공감시를 위한 장거리 대공감시 레이더와 저고도 탐지위성에 의한 원거리 감시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연동체계를 구축하며,

둘째, 해상감시를 위해서 기동전력(Platform)에 능동배열 다기능 레이더 및 적외선(IR), 신호정보체계를 탑재 운용하고 또한 연안기지 및 주요 도서에 초수평선 레이더를 설치하여 방위권(EEZ)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탐지·식별능력을 구비하며 감시위성, 조기경보기, 무인항공기 등의 원거리 감시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연동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수중감시를 위해서 광해역 탐지를 위한 원거리 수중 조기경보체계와 주요 항만방어를 위한 항만방어체계를 복합적으로 구축하여 적의 수중침투를 조기에 탐지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해군 「지휘통제(C'I)」 체계

원활한 지휘통제를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전장정보를 공유하여 적시성 있게 의사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동시적, 통합적 전력운영이 가능토록 초고속 대용량의 군 정보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부 전술제대로부터 상부 지휘제대까지 전장을 실시간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초고속 멀티미디어 통신이 보장되어야 하며, 작전 제대간 수직적 또는 수평적 정보흐름을 보장하여 신속한 결심과 최적의 공격무기 사용을 통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휘통제체계는 신시스템 복합체계(ISR+C⁴I+PGM/PLATFORM) 구성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하므로 전장감시체계(ISR) 및 타격체계(PGM)와 연동 가능토록 하며,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지휘관 및 참모들이 다양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능형 체계로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해군 C⁴I 체계는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위성통신체계 및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을 연결하여 광대역 정보유통 및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도록 구축함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육상 지휘소와 해상 작전요소간에는 위성통신 및 무선망체계를 구성하고, 함정 및 항공기 등 해상작전 요소간에는 전술자료 교환을 위한 KNTDS 체계를 이용한 전술 디지털 정보망(TADIL : Tactical Digital Information Link) 구성을 해야 한다.

또한 해군 C⁴I 체계 구축을 국방정보화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국가 정보망을 이용한 전략제대 및 각군 C⁴I 체계와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감시체계와 기타 수단으로 획득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처리·분석·융합·평가되어 필요한 지휘관 및 참모에게 실시간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조직과 교리 등도 정립해야 한다.

다. 「정밀타격(PGM)」 체계

정밀타격체계는 감시·타격(Sensor to Shooter) 개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장감시체계 및 지휘통제체계와 연동되도록 구축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해양으로부터의 장거리 정밀교전 또는 적 중심을 효과적으로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함(잠)대지 유도무기는 적의 전략적 중심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체계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고도의 생존성, 정확성 및 타격능력을 구비하고 기동전력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변국의 유도무기체계 성능을 고려하여 아축이 우월한 사거리를 갖도록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

특히, 함대공 유도무기는 주변국(러시아, 중국)이 전략 및 탄도/순항유도탄을 다량 보유하고 있고 제3국을 중심으로 대량 살상무기(WMD)의 보유가 확산되는 추세를 고려시 해상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요격체계로서 장거리 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함포체계는 유도포탄 및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할 수 있는 신형함포를 개발하여 대지 공격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합동작전 능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라. 「플랫폼(Platform)」 체계

해군함정은 다양한 첨단무기체계를 탑재하고 기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기동전투 지휘본부, 중심타격 유도탄부대 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해군은 해양전장 공간에서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해군함정이 갖는 융통성은 국가방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역할, 해상교통로 보호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기동성을 활용하여 분쟁 발생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해군함정은 국제적 활동을 위해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전력이 가질 수 없는 커다란 장점과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의 미래 잠재적 분쟁대상국들은 선진 강대국들이다. 한국이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의 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상대의 취약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비대칭 전력은 바로 상대의 취약점을 활용하는 전력을 일컫는다.

한반도의 해양환경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들은 미래분쟁에서 한국 해군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상대의 취약점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해군의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은 인공지능기뢰, 잠수함 전력, 지대함 미사일, 스텔스 미사일 함정, 전자전 능력 등이 있다. 특히, 잠수함 전력은 은밀성, 생존성이 가장 뛰어난 전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군은 주변국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비대칭 전력으로 잠수함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중 장기작전 능력과 은밀성을 보유하고, 원거리 대지공격능력을 구비하여 적 주요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응징보복 능력을 갖추는데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마. 정보작전(마비, 보호) 체계

정보작전이란 “군사적인 정보우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군의 정보 및 정보체계를 적의 교란, 파괴,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적의 정보 및 정보체계를 교란, 마비, 파괴하는 군사작전”을 말한다.

이러한 정보작전은 국방정보체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연계 발전됨으로써 정보체계를 공격할 수 있는 공세적 정보작전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미래해전에서는 물리적/외형적인 군사 시스템 파괴보다 신경조직 계통인 네트워크화된 정보지식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보작전이 더욱 중요시 될 것이다. 따라서 해군은 미래해군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작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적의 핵심전력체계를 기습적으로 마비·무력화시켜 초전에 전장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적의 정보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 공격용 바이러스와 Chipping, AMCW(Autonomous Mobile Cyber Weapon) 등 소프트웨어 무기 및 적의 정보체계에 침투하여 정보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 해킹기술을 포함한 사이버 무기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정보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전사, 행정담당자, 보안담당자들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전문화된 정보전사(Information Warrior) 확보 방안을 연구 개발하여 이들로 구성된 사이버 부대를 창설해야 된다.

셋째, 적의 정보작전 공격에 대비하여 아군의 전력체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기관의 정보보호센터, 바이러스 연구소 등을 활용한 방어적 정보작전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4. 조직 발전방향

해군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 해군조직 전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혁신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리스트럭처링”, “리엔지니어링”, “다운사이징” 등의 기법을 통하여 한계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기존의 업무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등의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최근에는 “학습조직”이 등장함으로써 경영혁신의 초점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쪽으로 옮겨가고 있다.³⁴⁾

34) 기업의 경영혁신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구조조정(RS : Restructuring) : 장래의 주력사업 위주로 기존의 사업을 축소·철폐·통합하는 방법, (2) 업무절차 재구축(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기능 위주에서 업무절차 위주로 업무방식을 재편하는 것을 의미, (3) 조직축소(Downsizing) : 외부경제환경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대한 관리층과 중복된 조직을 개편하여 인원과 경비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혁신방법, (4) 학습조직이론(Learning Organization Theory) :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조직만이 경쟁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의 실현을 위해 배움을 기업에 체질화시키는 경영방식 등이 있다.

해군의 조직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시에는 군사력 건설을 위해, 전시에는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조직내에서 생성되는 모든 지식과 획득 가능한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조직 구성원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식관리체계(Knowledge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는 이러한 지식관리체계를 활용하면서 축적되는 경험을 자료화하여 과학적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³⁵⁾을 개발함으로써 최적의 의사결정을 보장할 수 있는 지식중심의 조직(Knowledge Centric Organization)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서 지식중심의 조직이란 각종 자료나 경험, 획득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식관리체계와 과학적인 기법을 적용하여 응용할 수 있는 전문가 체계를 활용하여 최적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해군은 기존의 조직을 단순한 구조조정 차원이 아니라 지식중심의 전문화된 조직으로 변형시켜 효율화와 간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운영체계 발전방향

해군의 운영체계란 조직, 인력, 제도 등을 활용하여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는 수단을 의미하며, 조직관리 및 인력관리, 무기획득체계, 기술개발 및 정보체계, 군수지원체계, 교육훈련체계 및 모델링 & 시뮬레이션체계 분야를 포함한다.

35) Expert System이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영역에 대하여 전문가의 지식과 노하우를 프로그램화하여 비전문가들의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체계로서 그 응용분야는 무수히 많다. 예를 들면, (1) 정보분석 지원용 전문가 체계 : 육군 전투지휘훈련단에서 운용중인 체계로서 전출처 첩보를 실시간에 종합 및 자동 분석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생산된 정보는 화면을 통해서 지휘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 (2) 국가 석유위기 대응 전문가 체계 : 한국 석유공사에서 '99년 도입한 체계로서 위기요인을 조기에 감지하여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지원하는 체계 등이 있다. 해군 군사혁신단, 『해군 군사혁신 개념 및 방향』, 2001, p. 200-151.

해군은 각 분야별 운영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각급 관련부대와 부서간의 업무절차 개선을 통하여 업무의 표준화 및 재사용성을 확대하고, 가용자원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선 업무절차혁신(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과 전사적 자원관리기법(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을 활용하고 사회의 전문 기술인력을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많은 양의 정확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업무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운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여 각 분야별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가. 업무절차 분야

업무수행절차를 단축하고 중복업무를 제거함과 동시에 업무결과의 자료화를 통한 재사용성을 확대하여 업무수행의 적시성, 정확성 및 업무처리량을 증대시키고 또한 업무절차 및 기술 표준화를 실시하여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업무절차 분석을 위해 각종 업무절차 혁신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업무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나. 무기획득 분야

해군에 필요한 전략적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독자적인 기술능력을 축적하기 위한 계약 및 협상팀 운영을 제도화하고 인력개발, 원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무기체계 획득업무는 하드웨어 위주의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 위주의 국내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획득업무 추진시 일관성, 전문성,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관리자(PM : Program Manager)와 협상 및 언어능력 보유자 양성이 필요하다.

다. 기술개발 및 정보화 분야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먼저 보고, 빨리 타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의 해상전 수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회의 대국방우위 기술이나 정보통신체계 관련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라. 군수지원체계 분야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통하여 다품종·소량의 군수소요를 적시·적소에 지원할 수 있는 속도 중심의 군수지원체제로 발전시키고, 해양에서의 원거리 작전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동 군수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정보화 기반의 정비지원체계(Maintenance Assistance System)를 구축하여 신기술이 응용된 무기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유지하고, 기술인력을 통합하여 기능과 분야별 팀 위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 교육 및 훈련체계

컴퓨터 및 정보 통신체계를 활용하여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교육 수강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미래에는 실전적인 해상훈련이 환경문제, 비용문제 등으로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해상전 상황 및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이버 훈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바. 모델링 & 시뮬레이션 체계

선진화된 국내 민간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사이버 교육체계, 워게임체계, 전술훈련체계 등을 개별적으로 구축하되 네트워크로 상호 연동 가능토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과학적인 연구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무기체계 개발 및 평가시 가상모형(Virtual Pototypes)을 활용하여 수명주기 도래시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획득체계(SBA : Simulation Based Acquisition) 구축도 필요하다.

V.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1. 건설을 위한 선결과제

‘대양해군’ 건설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없지 않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나라가 작고 경제력이 부족하다거나, 유사시 미국이 지원해 줄 것이라는 생각 또는 주변국들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대양해군은 한국에 맞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각 분야별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환되어야만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나라가 작아 큰 함정(경항모, 중잠수함 등)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으나 결코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다. 단지 주변국이 크다 보니 작게 보일 뿐이며, 국토나 인구면에서 해양강국인 영국과 비슷한 국가이다.

둘째, 경제력이 대양해군 건설에 아직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 140여개국 중 경제력이 12위이며, 실제로 경제력이 우리보다 낮은 태국, 인도, 아르헨티나도 항모를 보유하고 있다.

셋째, 미 해군의 지원으로 해군력 증강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으나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나 국익문제는 미국 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고 해양에서의 사활적 국익은 반드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주변국 군비증강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으나 주변국은 우리 해군 증강에 무관하게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고, 우리의 현 수준은 아직까지 북한보다 열세하며 주변국(중·일·러)과는 경쟁이 안되는 수준이다.

다섯째, 국가재정상 예산획득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으나 해군력 건설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경제력 고려시 가용 국방비내에서 각군별 적정 수준의 예산배분이 보장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모든 사안들이 올바르게 인식되어지고 모든 공감대를 이룰 때 비로소 해군이 지양하는 대양해군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며, 특히 정책결정권자 및 여론 주도층의 올바른 판단과 이해 그리고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2. 해군력 건설을 위한 예산 확보

지금까지 우리는 전력발전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안해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 안보의 축을 이루어왔던 주한미군의 감축과 역할 축소가 추진되고 있어 대체전력의 확보와 이를 위한 고도 첨단무기의 획득개발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국방비의 배분현황은 최근 수년간 경상운영비의 절대소요 증가로 투자비의 배분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상운영비가 '80년 58.8%, '90년 58%이던 것이 2000년에는 63%로 증가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투자비는 감소되어 2000년에 37%를 유지하였다.³⁶⁾

36) 『국방백서 2000』, 국방부

이렇게 감소된 전력증강비는 국방기획제도에 의해서 각군에 배분되어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효율적인 전력증강을 위해서는 필요 소요전력에 대하여 Bottom up Review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획득할 수 있는 예산이 배당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상의하달에 의해서 각군에 예산을 배당한 후 그 예산범위내에서 각군에서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에 의해서 각군에 배분된 예산의 비율은 '74년 울곡사업 이후 '99년까지 해군의 재원 배분율이 21%로서 3군 중 가장 낮았으며, 앞으로 '06까지 중기계획상으로는 배분율이 23~24% 수준까지 증가될 전망이나 아직도 육·공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21세기형 해군력을 건설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군력 건설은 기획단계부터 전력화까지 보통 10~15년 소요되고 합정은 첨단과 학기술의 집결체로 고가의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해군전력은 장기적 안목으로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³⁷⁾

미래 불확실한 안보상황하에서 균형자 역할 수행이 가능한 적정 해군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며, 3군의 균형적인 배분비율을 고려할 때, 국방전체 투자비의 28% 수준은 되어야 하겠다. 여기에는 흔히, 해·공군은 북한 위협이 최소화되거나 21세기 통일을 대비해서 발전해야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에 통일한국과 주변국간에 긴장이 조성되어 분쟁으로 증폭될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해양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이 분쟁요인들이 정치적,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을 때, 국가와 민족의 사활적인 이익이 걸린 문제이므로 군사적인 대응, 특히 해군의 대응이 요구될 것이다. 해군은 이러한 차원에서 부여된 임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위협들이 국토내에 도달하면 민족의 생존이 위태로울 것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차단 소멸시켜야 한다. 그러나 잠재적인 경쟁 상대들은 이미 세계 수위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 발전되고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확실히 해군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37) 합정 건조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소 9~11년이 소요되며, KSS-I은 18년, KDX-I은 13년이 소요되었다.

Ⅵ. 결 론

해군력이란 해양력의 군사적 구성요소로서 국가 해양력의 보호수단이며 전투수단으로서 해양을 사용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해양력의 핵심요소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지리적 환경, 즉 남북으로 신장된 반도의 좁은 영토, 분단된 국토, 주변 해양국가에 포위된 상황하에서의 해군력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중심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미래 동북아시아역은 육상 자원고갈, 해양대체자원 확보경쟁, 해군력 건설경쟁이라는 세 요소간의 상호 경쟁의 악순환에 의해 해양에서 분쟁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하에서 주변국들은 군사혁신 차원에서 전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결국 전장공간, 첨단기술력, 작전의 지속성 및 합동성 등의 측면에서 해전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한국 해군의 전략은 평시 적 도발을 억제하고, 국지도발시는 확전방지와 유리한 조건하에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며, 또한 전시에는 침략을 조기에 격퇴하는 것으로 수립했다. 이러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해군전력은 첨단정보통신, 컴퓨터기술 및 군사과학기술을 이용하여 5차원 전장공간에서 적보다 먼저 보고, 빨리 결심하여, 원거리 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해상, 해중, 항공, 상륙 및 정보전력 등으로 구성된 전력을 건설해야 한다. 또한 감시 및 정찰체계, 정밀타격/플랫폼 체계, 특수전력 및 지원체계를 지휘통제체계로 연결·통합하여 전투력 상승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시스템 복합체계(ISR+C⁴I+PGM/PLATFORM)의 전력을 건설해야 한다.

이러한 전력증강 방향하에서 그 수준은 북한에 대해서는 질적 우세를 통하여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가지며, 주변국에 대해서는 평소에 주변국의 도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발시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의 해군력을 건설해야 한다.

무기체계 발전방향은 해양방위권(EEZ)내의 모든 표적을 24시간 감시·정찰 및 조기 경보할 수 있는 능력과 주요 해상교통로상의 표적을 필요시 탐지 및 전파할 수 있는 해양 전장감시체계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지휘통제체계는 신시스템 복합체계(ISR+C⁴I+PGM/PLATFORM)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정밀타격체계는

해양으로부터의 적 중심을 효과적으로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리고 플랫폼은 상대의 취약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비대칭 능력을 갖추는데 관심을 집중해야 하고, 미래의 정보전에 대비 정보작전(마비, 보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조직의 발전 측면에서는 지식관리체계를 활용하면서 축적되는 경험을 자료화하여 과학적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을 개발함으로써 최적의 의사결정을 보장할 수 있는 지식중심의 조직(Knowledge Centric Organization)을 구축해야 한다.

운영체계 발전방향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많은 양의 정확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업무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운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여 각 분야별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시했던 해군력 건설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나라가 작고 경제력이 부족하다거나, 유사시 미국이 지원해 줄 것이라는 생각 또는 주변국들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전환하여 대양해군 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갖는 것이 선결조건이며, 미래 불확실한 안보상황하에서도 해군의 임무와 역할 수행이 가능한 적정 해군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3군의 균형적인 배분비율인 국방 전체 투자비의 28% 수준은 되어야 하겠다.

일찍이 영국이 2국 표준주의 해군력(Two-Power Standard), 독일은 대양함대(High Sea Fleet), 미국이 세계 제1위의 해군력(Navy Second to None) 등을 목표로 해군법을 제정하면서까지 해군력의 구축을 추구했던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세계 제1의 해군력을 건설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바다가 있어야 강토가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인식하여 정말 필요한 만큼의 해군을 건설하기 위한 국민적 여망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결집하자는 것이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지금부터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다면 국가의 번영과 민족의 생존에 대한 해양으로부터의 위협은 치명적이 되고 말 것이다.

〈參 考 文 獻〉

1. 국내 문헌

- 국방부, 『국방백서 2000』, 2000.
- 국방대학원, 『안보관계용어집』, 1994.
- 김재철, 『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국인의 미래가 보인다.』, 서울 : 김영사, 2000.
- 산업연구원/에너지 경제연구원, 『KIET 실물경제』, 1988.
- 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문제 분석』, 2001.
- 유재갑, “군사전략 · 전술의 이론과 실제”, 『호국』 6월호, 국방부, 1989.
- 육군교육사령부, 『군사이론연구』, 1987.
- 정삼만, “기동전 사상의 한국 해군에의 적용”, 제2회 전투발전 세미나 발표논문집, 전투발전단, 2000.
- 해군 군사혁신단, 『해군 군사혁신 개념 및 방향』, 2001.
- 해군본부, “대양해군 관련 용어 정의 정립 시달”, 전투발전단, 2001.

2. 국외 문헌

- David Robertson, 『A Dictionary of Modern Defense and Strategy』, London : Europa Publications Limited, 1987.
- Edward M. Earle, 『Makers of Modern Strategy : Military Thought from Machiavelli to Hitler(1943)』, 육군본부(역), 『현대전략사상가』, 서울 : 육군본부, 1975.
- Geoffrey Regan, 『Blue on Blue : A History of Friendly Fire』, New York : Avon Books, 1999.
- Harold J. Kearsley, 『Maritime Power and Twenty-First Century』, Dartmouth : Dartmouth Publishing Comapny Limited, 1992.
-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9~2000』, p. 145.
『Jain's Fighting Ship 1999~2000』.
- James Adams, 『The Next World War-Computers are the Weapons and the Front Line Is Everywhere』, New York : Simon and Schuster, 1998.

- John Spanier, 『*Games Nations Play*』, Washington, D.C. : A Division of Congressional Quarterly Inc., 1993.
『*Joint Vision 2010*』, 1997.
- Kent E. Calder, 『*Asia's Deadly Triangle : How Arms, Energy and Growth threatens to destabilize Asia Pacific*』, London : Nicholas Brealey Publishing Co., 1996.
- Martin Van Creveld, 『*The Transformation of War*』, New York : The Free Press, 1999.
- Milan N. Vego. "Naval Operational Art", 『*Naval War College Review*』, Newport RI : Naval War College, January 1995.
- Mark Bowden, 『*Black Hawk Down-A Story of Modern War*』, New York : Atlantic Monthly Press, 1999.
- Richard A. Gabriel, 『*Military Incompetence : Why the U.S. Military Doesn't Win*』, New York : Hill and Wang, 1985, p. 55.
『*The Military Balance 2000~2001*』, 2000.